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이슈&트렌드」
	중국 민영기업 자금난과 대응 정책
2018. 11. 23.	작성 KIEP 북경사무소

- 대내외적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레버리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가 민영기업에 집중되면서,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가 악화
 - 중국 기업들의 부채율 증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중국 국내 금리 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각종 긴축정책들을 시행했고, 그 영향이 1)정규 상업은행에서의 민간기업 대출 어려움, 2) 비정규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민영 영세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8년에만 4차례의 국무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여러 회의를 통해,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 11월 1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민영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라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추진의 주축으로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고품질 발전, 현대화된 경제체제 건설의 중요한 참여 주체라 언급함.
 - 11월 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금융 부문과 재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민영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10월 26일, 중국 국무원신문관공실(国务院 新闻办公室)에서 개최한 정책발표회에서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반공성(潘功胜)은 채권, 신용대출, 주식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영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발표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국유기업 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외부환경 변화와 대내적 반부패 투쟁 노선 채택, 다양화된 소비욕구 충족 및 국유기업 개혁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민영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실제로 민영기업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하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유기업과 함께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음.
 - 현재 중국 경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수의 50%,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지역 고용창출의 80%,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민영기업의 자금난은 경제 하방 압력, 시장의 불확실성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 융자통로 축소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일부 민영 기업들의 디폴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국유기업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민영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하방과 시장의 불확실성이지만, 중국 국내의 융자관리의 규범 부재, 지나친 실물담보 의존성, 거시경제의 레버리지 해소 정책의 효과가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함.

- 지급준비율 인하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 정책의 유지 및 중소기업과 3농 분야 대한 지원 강화
 - 기준을 인하를 통해 2018년도에만 2조 3천 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민간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엔젤금융 상품을 신설함.
 - 역회수채권,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유동성 확대 금융 수단을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함.

- 중소영세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권과 대출을 중앙은행 담보물권으로 인정
 - 신용평가 등급 AA급 이상의 영세, 친환경 3농 채권 및 우수 영세중소 민영기업 대출을 중앙은행의 담보물권 범위에 편입
 - 6월, 10월에 중소영세기업과 민간 기업만을 대상으로 각각 1,500위안 규모의 추가대출을 시행하였으며, 소액대출 금리를 0.5% 인하하고, 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
 - 2018년 3분기 엔젤금융 소액대출 총액은 9,5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배 증가했음.

- 거시경제지표평가의 역주기적 조절 기능을 활용하여 조세금융정책을 연계하여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혁신 촉진
 - 영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표 공제 한도를 1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확대함.

-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서 채권시장의 역할 강화
 - 민영기업 채권 금융수단을 신설하여 민영기업 채권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함. 중국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초기자금 조달, 시장화 전문기구 설립 및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리스크 헷징, 담보증액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활발하게 할 계획임.
 - 상업은행, 보험회사, 채권 신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민간기업 채권시장 운용주체로 활용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화 및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채권, 신용대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영기업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기로 함.

- 중국금융 40인 포럼 학술위원회 황이핑(黄益平) 주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및 정책지원 수단을 통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자금난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금리의 시장화와 과학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 금리산정에 있어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쌍궤제도는 올바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게 됨.

- 새로운 형태의 담보기금 설립, 융자 지원수단, 금리할인 등 정책의 최종책임은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음.

- 고객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과학적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고객을 매칭하여, 금융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자료

- 「从央行最新报告看破解民企融资困境」, 『凤凰财知道』, 2018-11-16.
- 「怎样合理地“求”民企?」, 『中国金融四十人论坛』, 2018-11-16
- 「商务部: 为民企创造更大发展空间: 支持民营企业在活动」, 『经济日报』, 2018-11-16
- 「李湛: 为什么要求民企, 以及该怎么求」, 『首席经济学家论坛』, 2018-11-16
- 「黄益平: 解决民企融资难题, 短期可以靠政策, 长期还得靠市场化」, 『中国金融四十人论坛』, 2018-11-17
- 「央行将采取三大举措改善民企金融服务」, 『中国战略新兴产业』, 2018-11-17